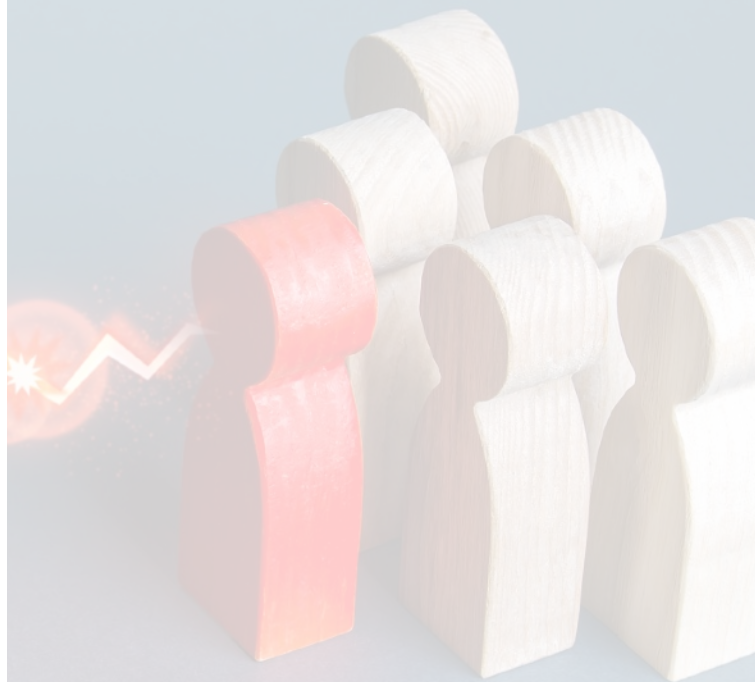


국민 이념 성향, 중도 줄어들고 보수/진보로 양극화 추세!

한국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그 속도만큼이나 갈등의 그림자도 짙어지고 있다. 최근 정부 조사(2024년 사회통합실태조사(한국행정연구원), 2024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등)에 따르면 국민 행복감은 소폭 상승했지만 걱정과 우울은 크게 늘었고,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도 역시 2년 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 갈등에 대한 인식이 매우 심각하다. 국민의 93%가 한국사회 갈등이 '심각하다'고 평가했으며, 갈등의 원인도 경제적 격차를 넘어 가치관 충돌과 이해 대립으로 이동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안전망의 약화도 확인된다.

이번 <넘버즈 314호>에서는 이러한 갈등과 신뢰, 정서적 변화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교회가 오늘의 분열된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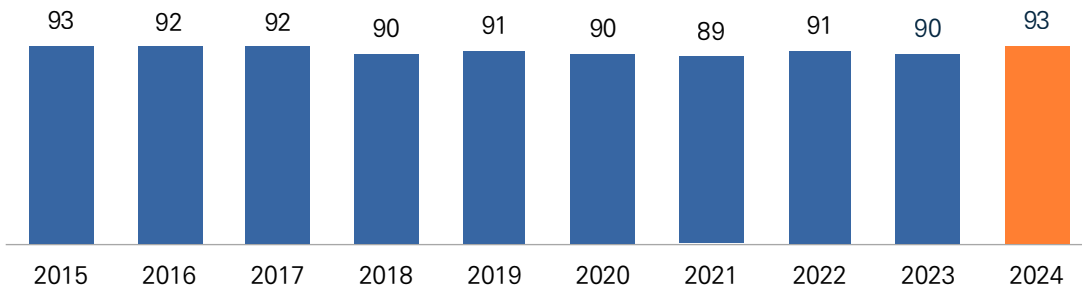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01

[사회 갈등] 국민 93%, 한국사회 갈등 '심각' ...전년 대비 3%p 상승!

-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에서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를 기반으로 우리 사회 갈등 현황을 살펴본다.
- 우리 사회의 전반적 갈등 수준에 대해 2024년 기준 우리 국민의 93%가 '심각하다'고 인식해, 전년(90%)보다 갈등 체감도는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갈등이 '심각하다'는 인식은 지난 10년 동안 큰 변화없이 90%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우리 사회의 전반적 갈등 수준 (일반국민, '심각하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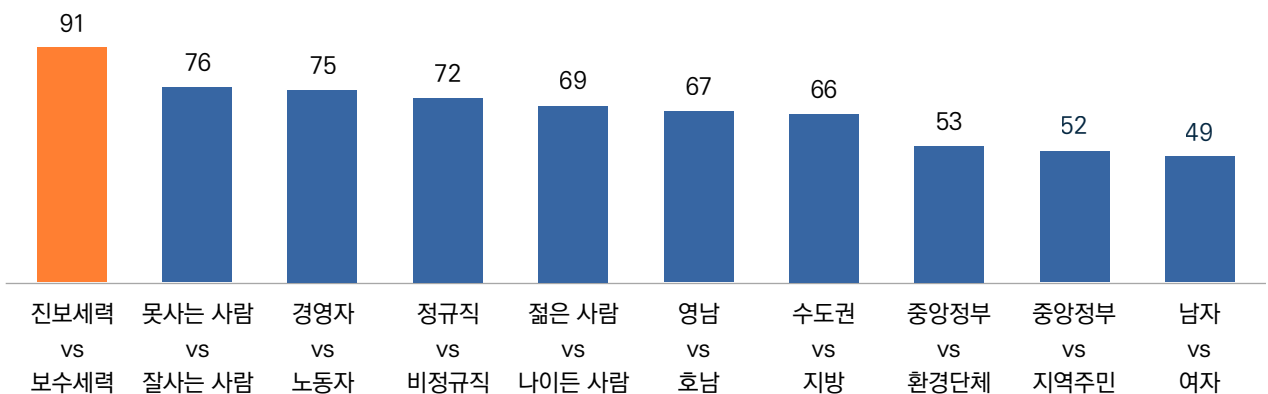
※출처 :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한국리서치, '2024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2025.01.23.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4.12.30. ~2025.01.06.)

*본래 10점 척도, 구간별로 심각하지 않다(전혀+별로), 보통, 심각(매우+약간)으로 구분한 것으로 보임

한국의 가장 큰 갈등 영역, 1위는 이념갈등!

- 14개 집단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한 갈등 심각성을 평가한 결과, '심각하다'(매우+약간)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진보세력과 보수세력'으로 91%에 달했다. 이어 '못사는 사람과 잘사는 사람' 76%, '경영자와 노동자' 75% 등의 순이었다.

[그림] 집단 간 갈등의 심각성 인식 (2024, 일반국민, '심각하다' 비율*, 상위 10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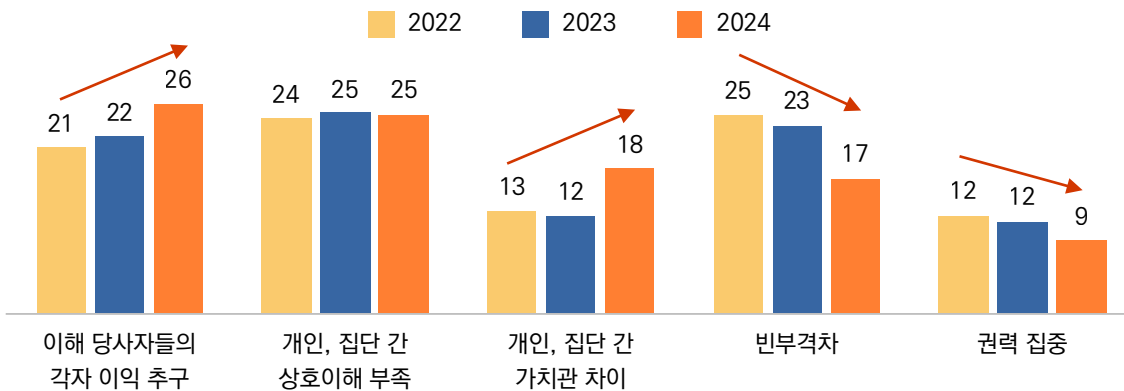
※출처 :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한국리서치, '2024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2025.01.23.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4.12.30. ~2025.01.06.)

*5점 척도

갈등의 주된 원인, 경제적 격차에서 ‘가치관·이해 대립’으로 이동!

- 한국행정연구원은 매년 초 주관적 웰빙, 사회적 소통, 신뢰, 관용성, 사회보장 등 8개 부문을 조사해 우리 사회의 사회 통합 수준을 진단하고 있다.
- 최근 발표된 ‘2024년 사회통합실태조사’를 통해 지난 3년간 사회 갈등의 원인을 살펴보면, ‘각자 이익 추구’와 ‘개인·집단 간 가치관 차이’를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꼽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한 반면, ‘빈부격차’와 ‘권력 집중’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 이 같은 변화는 한국사회 갈등의 중심축이 경제적 격차에서 이해당사자 간 이익 경쟁과 가치관 충돌로 뚜렷하게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사회 갈등의 원인 (2022~2024, 일반국민, 상위 5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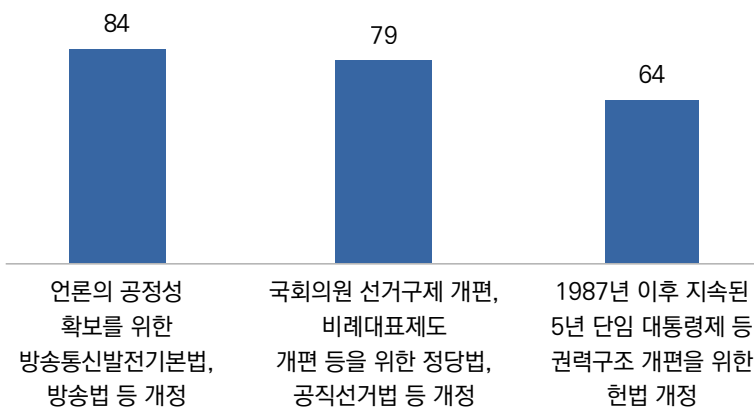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 2024년 사회통합실태조사, 2025.01.(만 19세 이상 남녀 8,251명, 케이스탯리서치, 면접조사, 2024.08.01.~09.30.)

사회 갈등 완화의 핵심 과제, 언론 신뢰 회복과 정치 제도 개선!

- 갈등 예방과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의 시급성을 물어보았다. 그결과, ‘언론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방송법 등 개정’이 84%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 비례대표제도 개편을 위한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 개정’(79%),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헌법 개정’(64%) 순이었다.
- 국민들은 언론 신뢰 회복과 정치제도 개선이 갈등 완화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정책 도입 시급 정도 (2024, 일반국민, %)



※출처 :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한국리서치, ‘2024 한국인의 공공갈등 인식조사’, 2025.01.23.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4.12.30.~2025.0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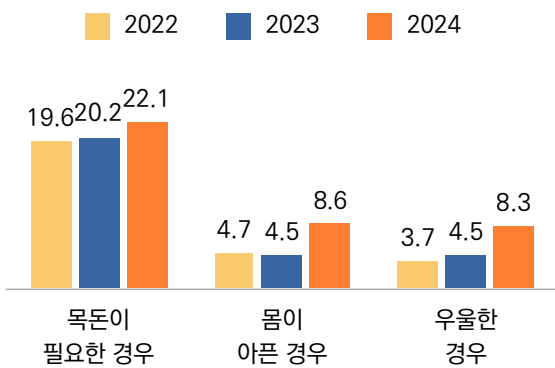
02

[사회적 고립/포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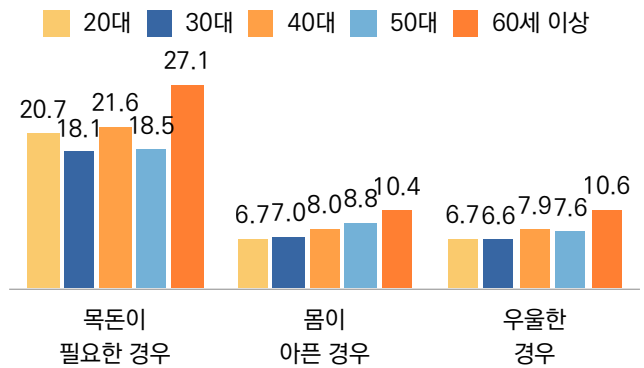
내가 어려울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 없다',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 금전적·신체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목돈이 필요한 경우'(19.6%→22.1%), '몸이 아픈 경우'(4.7%→8.6%), '우울한 경우'(3.7%→8.3%) 모두에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도움받기 어려운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목돈이 필요한 경우(27.1%), 몸이 아픈 경우(10.4%), 우울한 경우(10.6%) 모두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수준으로, 고령층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상대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없음' 비율 (일반국민, %)



[그림] 연령별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없음' 비율 (2024, 일반국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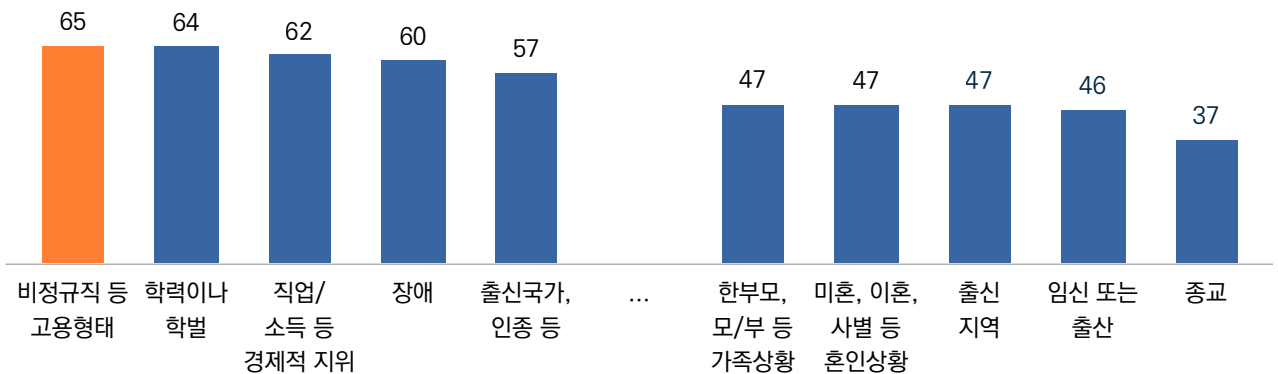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 2024년 사회통합실태조사, 2025.01.(만 19세 이상 남녀 8,251명, 케이스탯리서치, 면접조사, 2024.08.01.~09.30.)

우리 사회 차별, '고용형태' 가장 높고, '종교'는 가장 낮아

- 우리 사회의 차별 인식을 살펴보고자 16가지 조건을 제시한 후 이로 인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고용형태'(65%)가 가장 높은 차별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어 학력·학벌(64%), 경제적 지위(62%), 장애(60%), 출신국가·인종(57%) 등의 순이었다.
- 반면 '종교(37%)'에 따른 차별 인식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우리 사회의 차별 인식이 주로 고용, 학력, 경제적 지위 등 사회·경제적 요인에 집중되어 있으며, 종교적 요인에 대한 차별 체감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림] 우리 사회의 차별에 대한 인식 (2024, 일반국민, '매우+약간 있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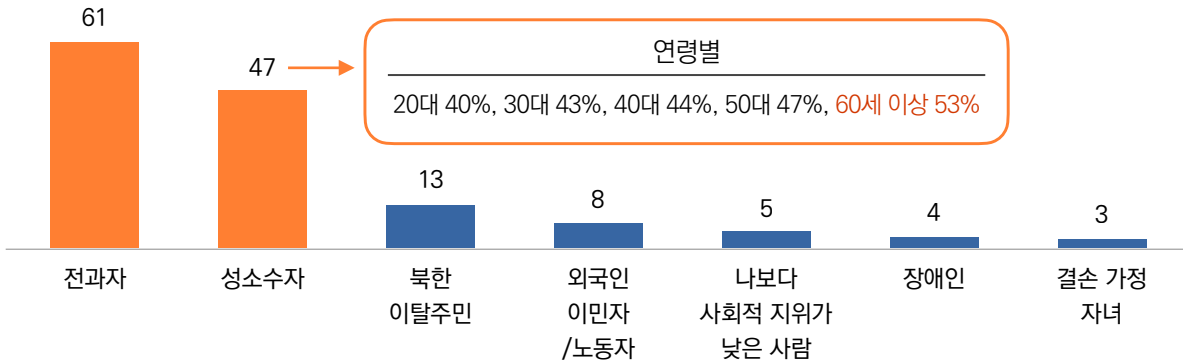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 2024년 사회통합실태조사, 2025.01.(만 19세 이상 남녀 8,251명, 케이스탯리서치, 면접조사, 2024.08.01.~09.30.)
*4점 척도

성소수자 ‘받아들일 수 없다’ 47%!

- 우리 국민들은 소수자 집단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와 관련 7개 소수자 집단을 제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 수용도를 물었다. 그결과, 가장 배제 인식이 높은 집단은 전과자(61%)였으며, 그 뒤를 성소수자(47%)가 이었다. 국민 절반 가까이가 성소수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응답했다.
-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성소수자를 수용할 수 없다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반면, 장애인(4%), 결혼 가정 자녀(3%) 등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응답이 매우 낮아, 소수자 배제 인식이 집단별로 크게 차별화되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소수자 배제 인식 (2024, 일반국민, '받아들일 수 없음'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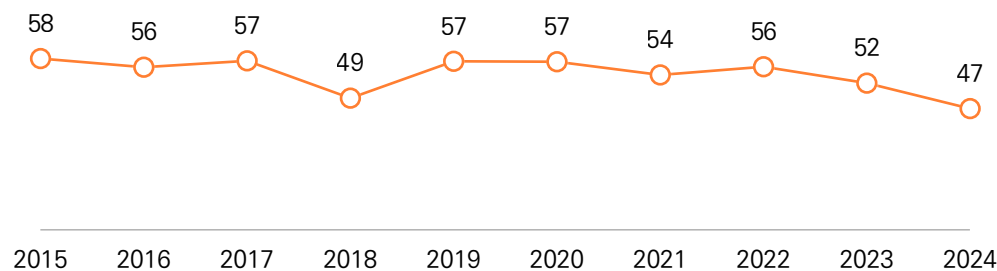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 2024년 사회통합실태조사, 2025.01.(만 19세 이상 남녀 8,251명, 케이스탯리서치, 면접조사, 2024.08.01.~09.30.)

성소수자 ‘수용 불가’ 인식, 10년 만에 최저치로 하락!

- 이번에는 최근 10년간 성소수자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본다.
- ‘성소수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50%중후반을 유지했다. 이후 2018년에 49%로 한차례 크게 떨어졌으나,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다시 54~57% 수준으로 회복했다.
- 그러나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2024년에는 47%로 떨어져, 최근 10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림] 성소수자 배제 인식 추이 (2015~2024, 일반국민, '받아들일 수 없음' 비율, %)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 2024년 사회통합실태조사, 2025.01.(만 19세 이상 남녀 8,251명, 케이스탯리서치, 면접조사, 2024.08.01.~0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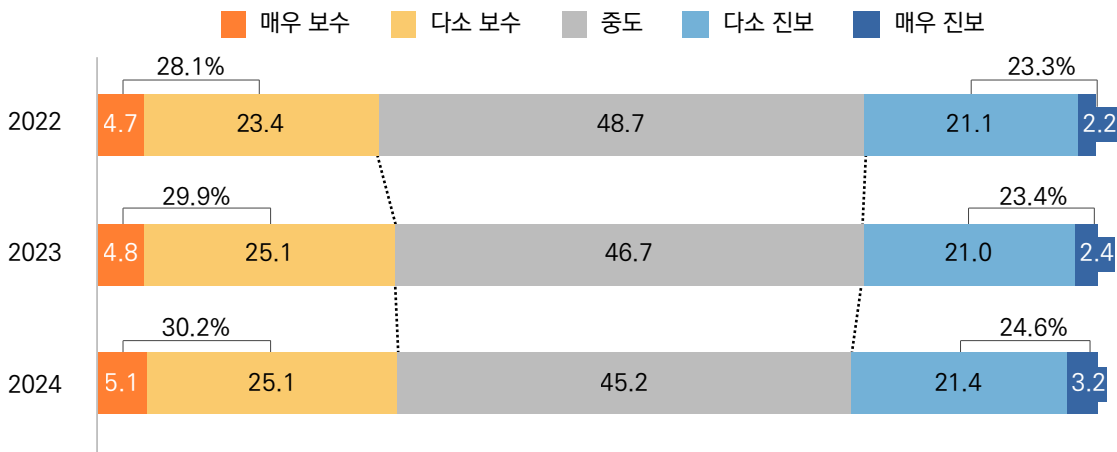
03

[사회 통합]

국민 이념 성향, 중도 줄어들고 보수/진보로 양극화 추세!

- 일반 국민의 이념 성향을 살펴보면, '중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4년 45.2%). 그러나 최근 3년간 중도층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보수와 진보 응답은 점차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 2024년 기준 보수 성향(매우+다소 보수)은 30.2%, 진보 성향(매우+다소 진보)은 24.6%로 나타나, 중도층이 점차 보수 혹은 진보로 이동하며 이념 지형이 서서히 양극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국민 이념 성향 (일반국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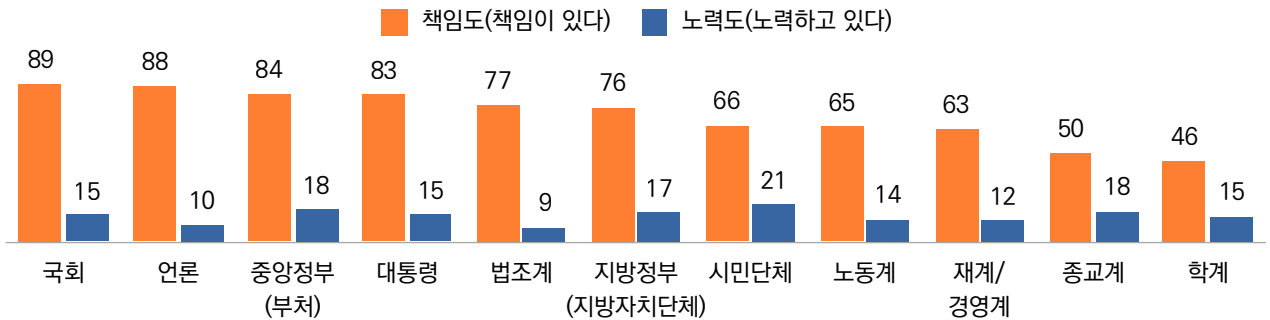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 2024년 사회통합실태조사, 2025.01.(만 19세 이상 남녀 8,251명, 케이스탯리서치, 면접조사, 2024.08.01.~09.30.)

사회 갈등의 책임은 국회·언론, 해결 노력은 시민단체·중앙정부·종교계가 앞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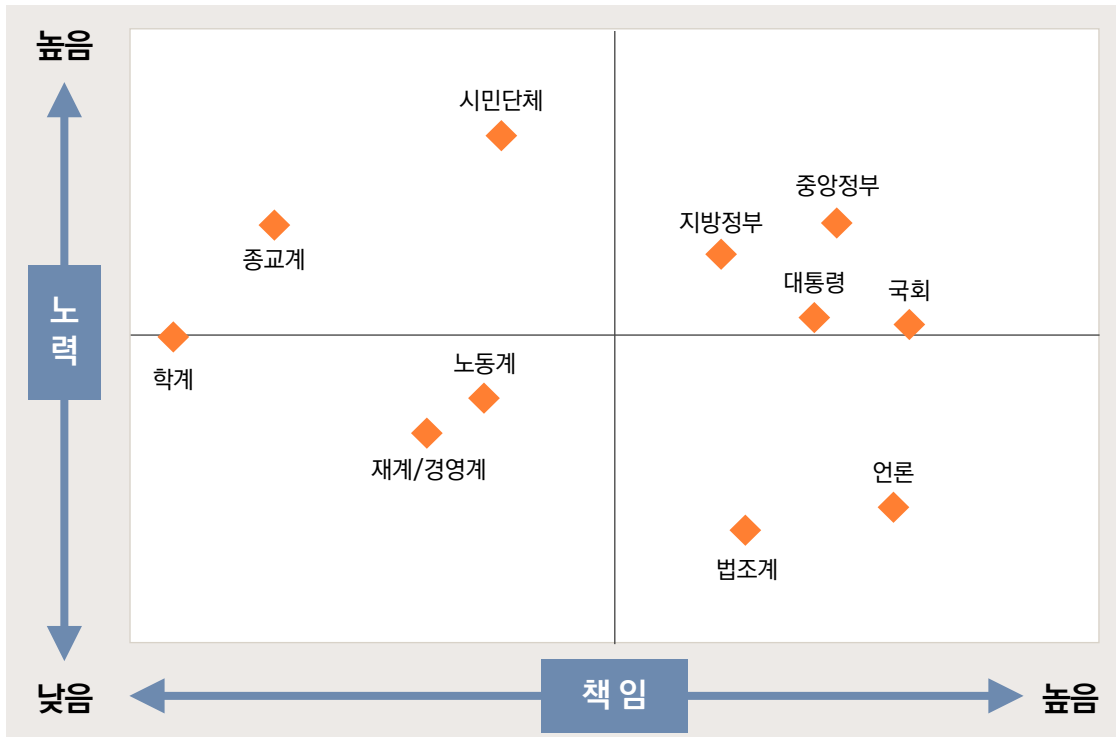
- 사회 갈등 책임 인식에서 국민은 국회(89%)와 언론(88%)을 가장 큰 책임 주체로 지목했다. 반면 갈등 해소를 위해 실제로 노력하고 있다는 비율은 시민단체(21%), 중앙정부(18%), 종교계(18%) 순으로 나타나, 책임과 노력 사이에 뚜렷한 간극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 전반적으로 사회 갈등 책임 정도에 비해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도는 시민단체를 제외하고는 20% 미만의 낮은 수준을 보인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사회 갈등 책임도와 사회 갈등 해소 노력도 (2024, 일반국민, %)



- 사회 갈등 책임도와 해소 노력도 Portfolio를 보면 높은 책임에 비해 노력이 낮은 그룹은 언론과 법조계로 나타나 우리 사회 언론과 사법 신뢰도가 낮은 이유를 말해준다.
- 책임도 높고, 상대적으로 노력도 높은 집단은 국회, 중앙정부, 지방정부, 대통령으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비교적 높은 평가를 얻었다.
- 한편 책임은 낮지만 상대적으로 노력하는 집단으로는 시민단체와 종교계가 꼽혀 주목된다.

< 사회 갈등 책임도와 해소 노력도 Portfolio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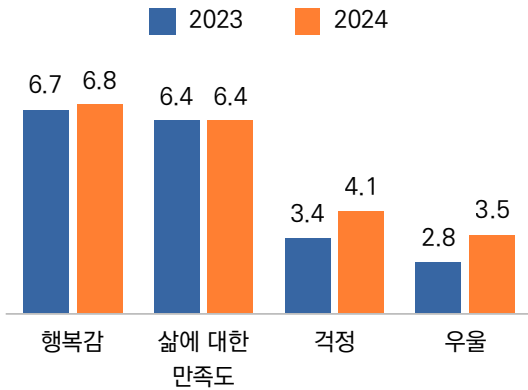
※출처 :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한국리서치, '2024 한국인의 공공갈등 인식조사', 2025.01.23.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4.12.30. ~2025.01.06.)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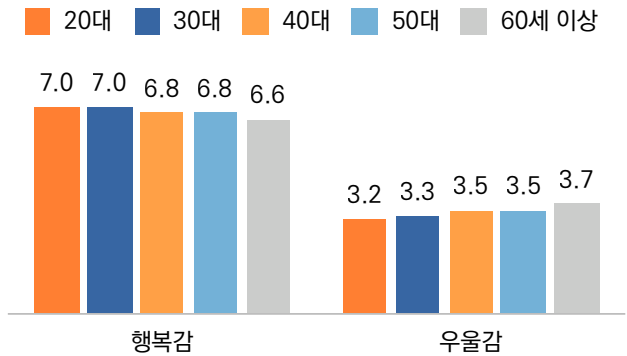
[국민 행복감/사회 인식] 국민 행복감은 소폭 상승, 걱정·우울은 크게 증가!

- 우리 국민의 주관적 웰빙 수준을 살펴본 결과, 행복감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반면 걱정, 우울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행복감은 낮아지고, 우울감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점이 주목된다.

[그림] 주관적 웰빙 수준* (2023~2024, 일반국민, 점)



[그림] 연령별 행복감과 우울감* (2024, 일반국민,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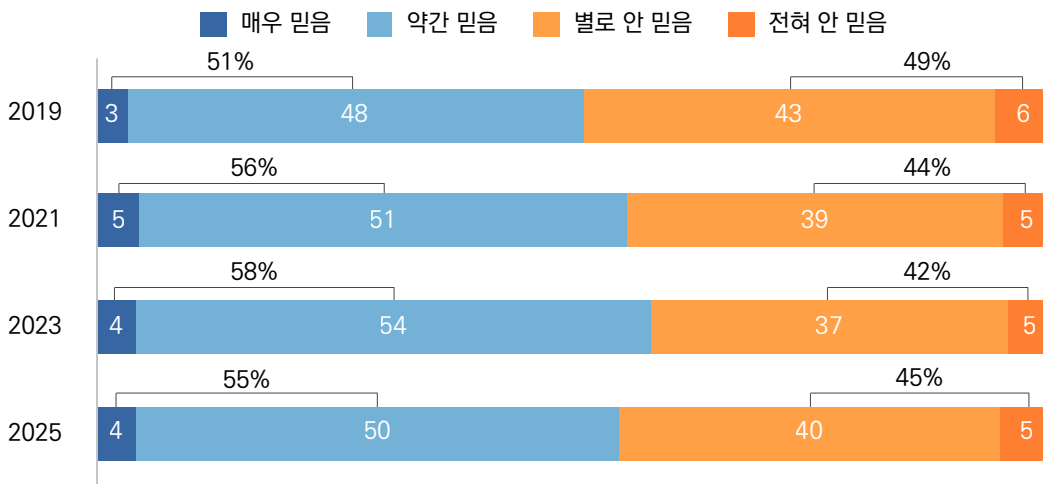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 2024년 사회통합실태조사, 2025.01.(만 19세 이상 남녀 8,251명, 케이스탯리서치, 면접조사, 2024.08.01.-09.30.) *0-10점 척도

국민 55%, '우리 사회를 신뢰'...2023년 대비 신뢰 약화!

- 국민들은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를 갖고 있을까?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신뢰한다'는 응답은 55%(2025년)로, 국민 절반 이상이 우리 사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 6년 전인 2019년 51%에서 2021년 56%, 2023년 58%로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높아지다가 2025년(55%)에는 다소 하락한 흐름을 보였다.

[그림]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도 (일반국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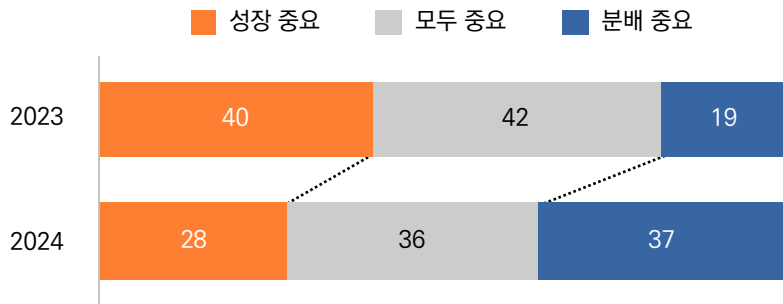


※출처 : 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 2025년 사회조사 결과(복지·사회참여·여가·소득과 소비·노동), 2025.11.11. *4점 척도

성장보다 분배가 중요, 1년 새 크게 증가

- 국가가 추구해야 할 가치로 성장과 분배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물은 결과, '분배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37%로 가장 높았으며, '성장과 분배 모두 중요하다'는 응답은 36%, '성장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28%로 나타났다.
- 특히 분배가 중요하다는 인식은 2023년 대비 18%p나 증가해, 국민들의 인식이 분배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성장과 분배의 중요성 인식 (2023~2024, 일반국민, %)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 2024년 사회통합실태조사, 2025.01.(만 19세 이상 남녀 8,251명, 케이스탯리서치, 면접조사, 2024.08.01.~09.30.)

이번호 요약

1. 한국의 가장 큰 갈등 영역, 1위는 이념갈등!

- 14개 집단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한 갈등 심각성을 평가한 결과, '진보세력과 보수세력'(91%), 즉 이념갈등이 가장 갈등이 심각한 영역으로 나타났다.

2. 국민 이념 성향, 중도 줄어들고 보수/진보로 서서히 양극화 추세!

- 일반 국민의 이념 성향을 보면, 중도가 45.2%로 가장 많지만, 최근 3년간 중도층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반면, 보수와 진보를 선택하는 응답은 점차 늘어나 이념 지형이 서서히 양극화되는 흐름을 보였다.

3. 사회 갈등의 책임은 국회·언론, 해결 노력은 시민단체·정부·종교계가 앞서!

- 사회 갈등 책임 인식에서 국민은 국회(89%)와 언론(88%)을 가장 큰 책임 주체로 지목했다. 반면 갈등 해소를 위해 실제 노력하고 있다는 비율은 시민단체(21%), 중앙정부(18%), 종교계(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적] 공론장의 구조변동 (나남출판, 위르겐 하버마스)

관련 성경 구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목회 적용점

한국 사회의 갈등 구조는 단순한 의견 충돌을 넘어 이념·세대·지역 전반으로 확장되며 사회적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국민의 93%가 갈등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념 성향은 중도층이 줄고 보수와 진보가 점차 양극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공동체의 결속을 회복하고 관계성을 새롭게 세우는 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시사한다.

무엇보다 교회는 사회 갈등의 책임을 묻는 인식 속에서도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집단'으로 언급될 정도로 도덕적·공적 기대를 받고 있다. 이는 교회가 갈등의 한쪽 편에 서기보다, 평화중재자이자 화해의 통로가 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이념·세대·지역을 아우르는 신앙 공동체의 자원은 사회가 갖지 못한 독특한 자산이며, 갈등을 치유하는 공동선의 역할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교회가 공적 갈등에 개입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갈등 해소를 정치적 영향력 확장이나 교회 이미지 개선의 도구로 삼는 태도는 위험하다. 갈등 화해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삶으로 구현하려는 신앙적 응답에서 출발할 때, 비로소 신뢰와 공감의 형성이 형성된다. 갈등을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회복해야 할 관계'로 보는 관점이 중요하다.

또한 갈등이 심화될수록 이웃 간 접촉은 줄어들고, 타 집단에 대한 배타성은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때 교회는 소그룹 모임, 세대통합 예배, 지역사회 대화모임 등 작은 실천을 통해 상호이해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

종교사회학에서 종교의 기능 중 하나가 사회통합 기능이다. 교회가 갈등의 주체가 아닌 갈등의 소용돌이에서 나와 통합의 기능을 수행하는 한국교회가 되길 소원한다.